

##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결정요인으로서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

황 윤 진\*

강릉원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 시민의 사회적 참여 등 연대와 협력 관계 속에서의 질적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기존의 경제적 자원 분배구조에 대한 설명력을 비물질적 요인 차원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자산으로 간주된다. 실증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의 핵심 구성 요소인 신뢰,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참여는 모두 경제적 불평등을 유의미하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신뢰가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닌 변수로 나타났다. 계층별 분석에서는 저소득층에서 사회적 자본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점은 사회적 자본이 구조적 취약계층에 대한 중요한 완충장치로 기능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설계에 있어 물질적 재분배 전략을 넘어서 사회적 자본의 제도적 육성과 계층 맞춤형 확충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사회적 자본을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의 전략적 기제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요어 : 사회적 자본, 신뢰,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참여, 경제적 불평등

---

\* 주저자: 황윤진/강릉원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죽헌길 7  
/Tel: 033-640-2168/E-mail: yjhwang@gwnu.ac.kr

## I. 서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sup>1)</sup>은 최근 들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경제학 등 여러 분야에서 각각 발전한 이론적 맥락을 공유하며, 공동체의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 시민 참여 등과 관련된 비물질적 자산으로서 기능한다.

사회학 분야에서 Bourdieu (1986)는 사회적 자본을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는 상징적·문화적 이익의 원천으로 해석했고, Coleman (1988)은 사회적 자본을 아동의 교육적 성취나 지역사회 안정성 같은 사회적 결과와 연결 지었다. 정치학 분야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시민 참여, 민주주의의 질, 제도적 신뢰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Putnam(1993, 2000)은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정부의 효율성과 정치적 책임성도 높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심리학 분야에서는 개인의 자아 존중감, 정서적 안정, 학업 성취와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sup>2)</sup>에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들은 미시적 인간관계에서도 사회적 자본이 ‘보이지 않는 자원’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시장 효율성과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는 비물질적 자산으로 규정한다. 이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요소들이 개인 간 혹은 집단 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감소시키고, 비공식적 계약 및 협력의 가능성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지닌다.

신고전과 경제학이 주로 ‘합리적 개인’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사람들이 신뢰와 협동을 통해 비공식적 계약을 체결하거나 긍정적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이는 Williamson (1985)의 거래비용 경제학, North (1990)의 제도 경제학 등과도 연결되며, 제도와 신뢰가 장기적 경제성장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동안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을 보더라도 주로 사회적 자본이 거래와 탐색비용을 감소시키거나 계층 간 갈등을 줄여주어 장래의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보는 시각들이 주를 이룬다. 예로서, Zak & Knack (2001)은 GDP 상승과 생산성 증진을 가져오는 무형의 가치 자본으로서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Zhang et al. (2017)은 중국의 지역별 분석에서, 사회적 자본은 더 질 좋은 투자와 기술 진보를 가능케 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Muringani, J., Fitjar, R. D., & Rodríguez-Pose, A. (2021)는 유럽 190개 지역을 분석한 결과, ‘브리징 사회적 자본’은 지역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본딩 사회적 자본’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sup>3)</sup> Pilatin, S., Kapusuzoglu, A., & Kucukvar, M. (2023)은 터키의 81개 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자본과 1인당 GDP 간에 상호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기능 중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경제적 불평등을

1) Coleman (1988), Putnam (1995), Fukuyama (1995), 유석춘 외 (2003) 등은 한 사회의 문화, 특히 그 사회의 신뢰 수준과 사회규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 등이 경제 효율성이나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이를 사회적 자본으로 명명하였다.

2) 예를 들어, Crosnoe (2004)은 가족과 학교가 제공하는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은 청소년기 성장과 학업 성취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보았고, 최정아 (2024)는 사회적 자본이 MZ세대 의사소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3) Putnam (2000)이 사회적 자본 개념을 구체화하면서 제시한 대표적 구분으로서 그는 인간관계의 범위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의 약한 유대(weak ties)를 통해 연결되는 사회적 자본을 브리징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가족, 친척, 가까운 친구처럼 강한 유대(strong ties)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을 본딩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으로 개념화하였다.

완화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그동안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분석은 주로 물질적 재분배와 제도적 개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신뢰, 공동체적 참여, 연대 등의 사회적 자본이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경제적 기회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가능케 할 수 있다면, 이는 정책적 차원에서도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신뢰<sup>4)</sup>와 사회적 관계망<sup>5)</sup>, 사회적 참여<sup>6)</sup> 등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요소들이 소득 계층별로 차별화되어 축적됐는지에 대하여 그 추이 및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주된 결정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소득계층별 모집단을 상대적 수준별로 식별하여,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에 양자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 II.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 1. 선행 연구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불평등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 혹은 해소하는 결정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 확충되면 개인들이 상호 간 신뢰 하에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밀접한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균

등한 사회적 기회의 분배가 촉진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대표적인 해외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Kawachi, I., Kennedy, B. P., & Wilkinson, R. G. (1999)은 사회적 자본의 부족이,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Putnam (2000)은 미국 내 지역 간 사회적 자본의 격차가 정치적 참여, 교육 수준, 경제적 평등 등 다양한 사회 지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불평등 수준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Guido & Giorgio (2012)는 이탈리아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과 성장 및 복지 문제를 살피고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불평등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Lilian & Jair (2018)는 사회적 자본이 브라질의 소득과 빈곤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소득 규모가 낮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소득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결과적으로 빈곤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OECD (2019)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사회적 이동성, 그리고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다루었는데 특히 사회적 자본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 불평등이 낮고, 사회적 이동성이 높다고 보고 이는 자산 분배의 공정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Samuelson A., Sefa, A. C., Russell S. & Quanda Zhang. (2022)는 중국의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사회적 자본의 격차가 경제적 불평등과 주관적인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Gu, L., Yang, L., & Li, H. (2023)은 중국의 ‘떠돌이 아동’과 ‘비떠돌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sup>7)</sup>에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정신건강이 더 양호하며 특히, 사회적 자본은

4) 가족과 이웃에 대한 신뢰, 공공에 대한 신뢰와 같은 공통 기반 확보를 요소로 하여 개인적 신뢰와 공적 신뢰로 구성된다.

5) 이웃과의 연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사회 유지 요소로서, 사적 네트워크와 공적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6) 공동의 목표 정립 요소로 사회적·정치적 참여로 구성된다.

저소득층 아동의 정신건강에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쳐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함을 보였으며 Skewes & Nockur (2023)은 13개국의 공공재 게임 실험을 통해, 국가 수준의 불평등이 높을수록 집단의 협력 수준이 낮아지고, 이는 사회적 자본의 약화로 이어져 공공재 기여도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Yang & Zhang (2024)은 중국의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사회적 자본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반면, '관시(關係)'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상반된 효과를 나타냄을 보였다. 관련된 최근의 국내 문헌으로는 김진현 (2021), 강성익, 구자훈 (2023) 연구들을 들 수 있는데 김진현 (2021)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 인식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 매개 역할을 함을 주장하였다. Kang & Koo (2023)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할수록 개인의 정신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소득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었거나, 사회적 자본의 단일 차원(예: 신뢰만 측정)에만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1) 순자산 기준의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구조적 불평등을 분석하고, (2)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구성요소(신뢰, 관계망, 참여)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며, (3) 소득계층별 효과를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 2. 이론적 배경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사회적 자본

은 '신뢰',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참여'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 시장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며, 공동체의 경제적 탄력성을 강화한다.

신뢰는 일회성 거래를 넘어 반복 거래(repeated transactions)를 가능하게 만든다. 반복 거래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 양측은 생산 설비 확충이나 공동 마케팅 등 대규모 초기 투자 결정을 내리기 용이해진다. 이는 '규모의 경제' 실현과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 완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의 확충은 정보·자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강한 결속은 가족, 친한 친구, 오랜 거래처 등과 심리적으로 깊은 연대를 형성시킨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중재자로서 구조적 구멍(structural holes)을 메우는 기능도 한다.<sup>8)</sup>

한편, 시민들이 지역사회와 비영리 단체, 협동조합, 자원봉사 조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공동체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강화된다. 이는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공공재 제공만으로는 메우기 어려운 간극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신뢰와 참여가 결합된 사회적 관계망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의사결정 속도의 향상을 가져온다. 또한 기업 간·산업 간 협업 프로젝트는 '시간당 거래비용(time-cost)'을 낮춰 전체 경제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이며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기술 혁신 속도를 가속화한다. OECD (2000)는 사

7) Gu et al. (2023)은 연구에서 중국의 도시화와 이주 현상 속에서 아동들의 사회적 위치와 접근가능한 자원에 따라 정서적, 사회적 안정감이 부족하고 사회적 자본(특히 브리징 자본) 형성에 제약을 받는 떠돌이 아동(Floating Children)과 태어날 때부터 도시 호적을 가진 아동 또는 도시에서 자라 상대적으로 양질의 교육과 사회적 자본에 접근이 가능한 비떠돌이 아동(Non-Floating Children)으로 구분하였다.

8) 사회적 연결망의 브로커(broker)로서 기능함이란 서로 연결되지 않은 두 집단을 중개하여 정보나 자원을 매개함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이론에서 '구조적 구멍'은 이질적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단절을 의미하며, 브로커가 이 구멍을 메우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이 따른다. 벤처 투자자들이 초기 스타트업과 대기업, 연구기관을 연결해 윈윈 파트너십을 이끄는 것이 좋은 예다.

회적 자본이 경제적 이익을 초월하여 사회적 결속력, 문화적 융화, 문제 해결, 혁신,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축과 구성원 간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한편, 경제적 불평등이란 소득, 자산 등의 경제적 자원과 기회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불균형하게 분배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에서는 일부 소수의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와 자원을 소유하고, 다른 계층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임금 격차, 고용 기회 불균형, 교육 격차, 성차별, 인종차별,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경제적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구조적인 부의 집중과 기회의 제한,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발전과 사회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평등도의 측정에는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사용되는데 통상 지니계수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및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로 구분한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sup>9)</sup>는 세금과 이전소득을 반영한 후의 가구 소득 분포를 기반으로 한 지표로, 단기적 분배 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먼저, 소득은 일정한 시점의 흐름(flow)을 측정하는 데 그쳐 장기적 자산 축적과 불평등의 세습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는 구조적 불평등의 본질을 은폐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둘째, 실직, 은퇴,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소득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나, 자산 보유를 통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소득 기준은 현실의 생활격차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자산은 실질적인 경제력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이를 포착하지 못한다. 특히 자산이 소득화되지 않거나 세제상 은폐되는 경우, 불평등 측정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처분가능소득은 조세 및 이전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분배 개선 효과가 과도하게 반영되어 실제 불평등 수준보다 낮은 수치를 보일 수 있고, 이는 정책적 현실과 괴리를 유발할 수 있다.

반면, 순자산(총자산 - 총부채)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경제적 불평등의 구조적 특성과 장기적인 세습적 성격을 측정하는 데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우선, 자산<sup>10)</sup>은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축적되는 경제력의 결과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지니계수는 단기 소득에 비해 보다 정적인 불평등 구조를 반영한다.

둘째, 순자산은 상속과 증여 등 세대 간 경제력의 이전 경로를 포함하므로,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장기적 지속성을 파악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자산 보유는 교육, 건강, 주거 안정성, 정치적 영향력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소에 직결되는데, 이에 따라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삶의 질과 사회적 기회 측면에서 격차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층, 자영업자 등은 소득은 낮더라도 자산은 많은 경우가 많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불평등을 과소평가하게 될 것인바,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이러한 현실을 보완해 줄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자산 구조 중 부동산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상속과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활발하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적 특성의 분석에는 자산을 중심으로 한 불평등 측정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9) tkinson & Brandolini (2001), Lustig (2016), World Bank. (2020), OECD. (2023) 등의 연구를 비롯하여 불평등 지표로서 대부분의 기존 문헌에서 흔히 사용되는 대표적 지표이다.

10)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위 10% 가구는 전체 순자산의 44.4%를 점유하며, 이는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2022년 기준, 자산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6억 5,457만 원으로, 하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 2,584만 원보다 64배 높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인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주된 변수로서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를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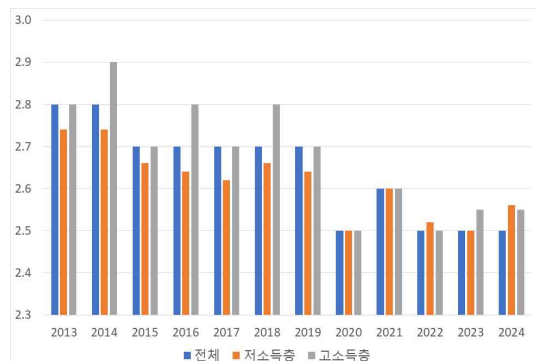
### III. 한국 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불평등 추이

사회적 자본 분석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패널자료<sup>11)</sup>를 활용하였고 경제적 불평등의 지표로서 처분가능소득 기준과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 추이를 비교하여 살펴본다.

사회적 자본 지표로서는 전술한 세 가지 유형인 ‘신뢰’,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참여’<sup>12)</sup> 각각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포착하여 분석한다. 신뢰를 나타내는 변수로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하는 정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믿을 수 없다’(1점) ~ ‘매우 믿을 수 있다’(4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척도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수치가 높을수록 사회적 신뢰감이 더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관계망 지표로는 ‘사회적 고립감’ 지표를 택하였다. 사회적 고립감은 본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밀도와 질을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지표로 사용되었으며,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하지만, 이 또한 경제적 소외를 반영하는 주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에 포함되었다. 사회적 고립감은 외롭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아무도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

는 것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1~4점 척도 각 평균값의 산술평균치이다. 따라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더 촘촘히 축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참여도는 ‘사회단체 활동 정도’로 측정하였다. 사회단체 활동 정도는 정당, 노동조합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종교단체, 동호회(스포츠, 여가, 문화 등), 시민단체, 지역사회 공공모임(반사회, 주민조직 등), 동창회, 향우회, 자원봉사 또는 기부단체,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활동 정도<sup>13)</sup>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소속된 적이 없다’는 응답을 제외한 비율의 평균치이며 따라서 동 수치는 척도가 아니라 %로 측정되었으며 수치가 높을수록 사회적 참여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소득계층 구분 없는 전체 응답자, 고소득층, 저소득층<sup>14)</sup>의 사회적 신뢰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자료: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패널자료  
<그림 1> 사회적 자본 중 신뢰에 관한 인식

- 11) 사회적 자본에 대해 한국에서 유일하게 체계적인 추적을 진행하고 있는 자료로서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한국사회의 공정성과 사회갈등의 수준을 파악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통합의 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본 통계는 2013년 이후 매년 5,000개 표본 가구의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가구원 중 조사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생일이 가장 빨리 돌아오는 가구원에 대한 면접조사 형태로 생성되어 국가승인통계로 수록된다.
- 12) 신뢰는 정서적 기반, 사회적 관계망은 구조적 기반, 사회적 참여도는 행위적 기반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이들은 공동체 내 상호작용의 질과 양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간주된다.
- 13) 자원봉사 또는 기부단체,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관한 설문은 2015년 이후부터 추가되었다.
- 14) 각 소득계층은 가구 월 소득 500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 기준에 대한 근거는 각주 18)을 참조.

2013년과 2014년에는 전체 평균 신뢰도가 2.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난다. 2015~2019년에는 2.7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2020년에는 2.5로 급감하며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후 2021년에 2.6으로 소폭 회복되었으나, 2022~2024년에는 다시 2.5선에 머물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의 신뢰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하며, 특히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사회적 충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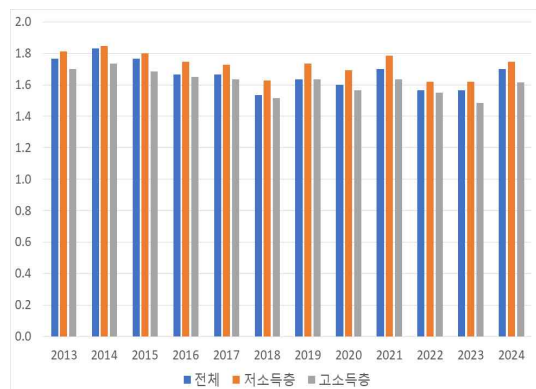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 신뢰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2013~2014년에는 2.74 수준이었으나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7년에는 2.62, 2020년에는 2.50까지 낮아졌다. 특이하게도 2022년에는 다른 계층에 비해 유일하게 신뢰도가 상승(2.52 수준)했으며, 2024년에는 고소득층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내에서 공동체적 연대가 다시 활성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소득 계층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2.8, 2.9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2016~2018년에도 2.8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9년 이후에는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며 2020년에는 전체 평균과 동일한 2.5 수준으로 수렴하였다. 2021년에는 소폭 회복했지만 이후 정체를 보였으며, 2024년에 다소 반등해 2.55 수준을 회복하였다.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에서는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겠으나 역시 외부 충격(예: COVID-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신뢰는 흔들림을 짐작할 수 있다.

종합할 때 2019년까지는 고소득층의 신뢰도가 높고, 저소득층이 낮은 구조가 뚜렷하였다. 하지만 2020년 이후에는 이 격차가 줄어들고, 특히 2024년에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을 앞서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층에서 사회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가했거나, 저소득층 내 집단 간 상호 의존성

이 강화된 결과일 수 있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회 전반에서 신뢰 구조 자체의 재편 가능성도 일견 보여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림 2>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인의 사회적 고립감 평균치를 나타낸 것인데, 이때 ‘사회적 고립감’은 사회적 관계망의 반대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고립감은 ‘외로움’, ‘자살 충동’, ‘타인의 무관심’과 같은 감정적 경험에 대한 응답 평균값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더 풍부하고 견고한 상태를 의미한다. 분석은 역시 전체 응답자, 저소득층, 고소득층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계층별 사회적 연결망의 강도와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자료: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패널자료  
<그림 2> 사회적 자본 중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인식

2013, 2014년 사회적 고립감은 각각 1.8,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이후 2018년까지 점차 고립감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 소폭의 증감 추이를 보이나 전반적으로 점차 수치가 상승하며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립감은 사회적·경제적 충격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변동하며, 특히 최근의 고립감 심화와 등락 양상은 COVID-19 팬데믹 시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생활 양식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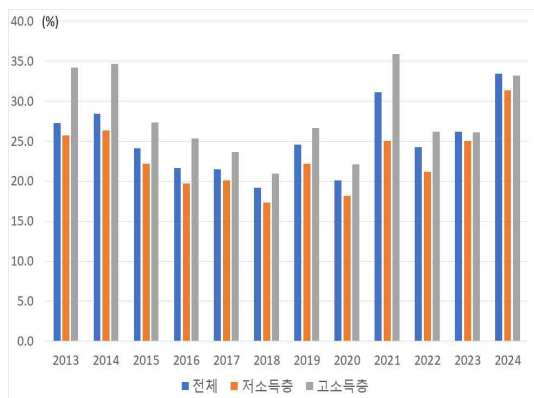
저소득층은 모든 연도에서 가장 높은 고립감 수치를 보인다. 2013~2015년에는 1.8 내외 수준으로 전체 평균보다도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후에도 고소득층 대비 저소득층의 고립감 수치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2021년에는 수치가 급격히 증가해 다시 1.8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사회적 단절이 저소득층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해당 시기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단절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립감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고소득층이 사회적 관계망이 가장 잘 유지되는 집단임을 시사한다. 2013~2015년까지는 1.7 수준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고립감이 상승한 후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고소득층의 고립감 지표도 증가함에 따라 계층 간 고립감 수치의 격차가 수렴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계층 간 고립감 정도가 일시적으로 비슷해졌음을 의미한다.

종합할 때 분석 기간 초반에는 고립감 수치에서 계층 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2021년 이후 저소득층의 고립감 수치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하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사회적 관계망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관계망 측면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이중구조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2년에는 고소득층도 고립감을 더 크게 경험하며, 계층 간 격차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도 관찰된다. 이는 전 사회적인 정서적 피로감 혹은 COVID-19 팬데믹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단순한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심리적 기반이 얼마나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축적되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구조적으로 고립에 더 취약하며, 이들의 관계망을 복원하는 것이 사회 통합의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은 사회적 참여도 추이를 보여준다. 이 그림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인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율을 소득계층별로 추적한 것으로, '사회단체 활동 정도'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실천적 측면인 '사회적 참여도'를 정량적으로 보여준다. 진솔한 바와 같이 이 수치는 '소속된 적이 없다'는 응답자를 제외한 참여자 비율의 평균치이므로 수치가 높을수록 다양한 사회단체에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다.



자료: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패널자료  
<그림 3> 사회적 자본 중 사회적 참여도에 관한 인식

2013과 2014년에는 전체 사회적 참여도가 각각 27.3%, 28.4% 수준으로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19.2%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9~2021년에는 상승세로 돌아서며, 2021년에는 31.2%까지 회복되었다. 2022년에는 다시 소폭 감소했지만, 2023년과 2024년에 급등하며 2024년에는 33.5% 수준으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사회적 참여가 경기 침체나 사회 불안기에는 위축되었다가, 이후 복원력 있게 회복되는 경향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면 활동이 위축되었다가, 2021년 이후 새로운 형태의 참여가 활성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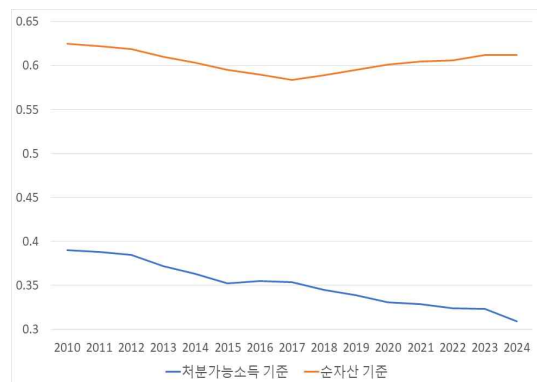
저소득층은 전반적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사회 참여도를 유지하고 있다. 2013~2015년에는 약 22~26%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참여를 보였지만,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17.4%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2021년에 다시 반등하며 25.1%로 상승했고, 2024년에는 31.4%까지 회복되었으나 고소득층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의 사회적 참여가 경제적 여건, 시간적 자원, 제도적 장벽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5년 이후 자원봉사 및 기부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등 참여영역이 확대된 반면, 저소득층은 이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고소득층은 모든 연도에서 가장 높은 사회적 참여도를 보인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34.3%, 34.7%에 달하였으며, 이는 전체 평균보다 약 6%p 정도 높은 수치이다. 2015년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2021년에는 다시 35.9%를 회복하며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 후 2024년에는 33.2% 수준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다른 계층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결과는 고소득층이 경제적·사회적 자원을 바탕으로 사회단체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예: 직능단체, 자원봉사단체, 협동조합 등)에 더 쉽게 접근하며, 네트워크 확장의 수단으로도 이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소득계층 간 비교할 때 2013년과 2014년 각 8.5%p, 8.3%p였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참여도 격차는 이후 4~6%p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21년에 10.9%p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최근 약 2%p까지 축소되었다. 이는 저소득층의 참여도가 최근 급격히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제도적 지원이나 공동체 기반 조직의 확장, 또는 비대면 참여 플랫폼의 발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림 1>~<그림 3>의 계층별 결과를 볼 때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이 계층별로 구조적 양극화 양상을 겪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계층 격차는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이 모든 지표에서 더 유리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소득층은 위기 상황 이후 빠르게 사회적 자본을 회복하고 재구축한 반면, 저소득층은 그 회복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구조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양극화는 단순히 심리적·정서적 차원을 넘어 정치 참여, 정책 수용성, 공동체 회복력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정도 추이를 살펴본다. <그림 4>에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도별 지니계수 추이가 처분가능소득 기준과 순자산 기준으로 나타나 있다.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호.  
<그림 4> 2010~2024년 연도별 지니계수 추이

전반적으로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산의 축적이 주택과 같은 고정자산에 집중되고 있으며, 자산을 축적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가구들과의 자산 격차가 더욱 심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2020년대 들어 주택 가격의 급등과 함께 순자산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자산 축적이 소득보다 더 중요한 불평등의 원인으로 작용

하는 양상을 보였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0년 0.390에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24년 0.309를 나타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만으로 볼 때 이는 소득 분배 구조의 지속적 개선을 시사한다. 이는 정책적 재분배, 복지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소득 재분배 정책의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2010년 0.625를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sup>15)</sup> 이후 다시 해마다 상승하며 2024년 0.612를 기록, 다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금융자산 격차, 상속·증여의 비중 증가 등 계층 간 자산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의 자산 불평등이 구조적이며 장기적으로 고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 형성과 공동체적 연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의 비물질적 자산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사회 구성원 간 신뢰 저하, 협력 수준 약화로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게다가 순자산 격차는 교육, 주거, 건강 등 여러 삶의 영역에서 기회 불평등을 낳아 사회 이동성을 저해하고 계층 간 단절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 분석을 시행한다.

#### IV. 추정 모형

본 장에서는 Blanchflower & Oswald (2004)의 모형을 보완한 식 (1)의 모델을 통해 한국에서 사회

적 자본이 경제적 불평등의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실증 분석한다.

$$inequality = f(SCV, CV) + e \quad (1)$$

식 (1)에서 inequality는 경제적 불평등의 척도이고 SCV는 사회적 자본 요인들이다. 그리고 CV는 경제적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통제 변수들이며 e는 오차항이다. 본 연구의 주된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사회적 자본의 확대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것이다.**

**가설 2 :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면에서 고소득 계층에 비해 저소득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과 유의미한 신뢰성을 보일 것이다.**

가설의 설정은 기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사회적 자본의 불평등 완화 기능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다. 예를 들어 Putnam (2000)은 신뢰와 시민 참여가 높은 지역일수록 공공재에 대한 접근성과 분배의 공정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Kawachi et al. (1999)은 사회적 자본이 소득 불평등과 건강, 교육, 기회 격차를 매개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OECD (2019)는 사회적 자본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이 완만하다고 보고하였다.

식 (2)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식 (1)을 선형화한 모형이다.

$$\ln inequality = \beta_0 + \beta_1 \ln T + \beta_2 \ln N + \beta_3 \ln P + \beta_4 \ln Y + u$$

(2)

여기에서, inequality는 식 (1)의 경제적 불평등에

15) 2018년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본격화된 해이다.

대한 proxy로서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를 사용한다.  $T$ ,  $N$ ,  $P$ 는 각각 사회적 자본(신뢰,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참여) 변수이고  $X$ 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통제 변수들이다. 사회적 자본 변수는 각각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 ‘사회적 고립감’과 ‘시민단체 활동 여부’를 사용하였으며 통제 변수들로는 1인당 소득 수준, 인적 자본, 재정지출 규모, 무역 규모를 고려하였다. 이들 중 소득 변수로는 1인당 실질 GDP를 사용하되, Kuznets (1955)의 ‘역 U자 가설’<sup>16)</sup>에 근거하여 GDP 제곱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까지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나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완화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을 대표하는 인적 자본 변수로서 한국의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을 이수한 비율을 사용하였다. 일견 고등교육 이수는 노동자들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높은 소득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되므로 인적 자본의 증가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적 자본의 확대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 변수가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결국 인적 자본의 확대가 경제적 불평등에 어떤 방향으로 기여하겠는가의 문제는 실증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한편, 재정지출 규모로는 GDP 대비 정부 재정

지출 비중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공공지출은 공공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재화 혹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재분배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Meltzer and Richard (1981)의 논의에서와 같이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불평등 수준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무역 규모로서 GDP 대비 무역 비중을 사용하였다. 무역 비중의 증가는 이론적으로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게 된다.<sup>17)</sup> 한국 무역패턴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고 저부가가치 제품을 수입하는 구조로서 한국에서 무역 비중의 확대는 숙련 노동자의 실질소득 상승을, 비숙련 노동자의 실질소득 하락을 초래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식 (3)과 (4)를 추가적으로 추정하는데 이들은 각각 저소득 계층과 고소득 계층이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text{Inequality} = \beta_0 + \beta_1 \ln T^{\text{low}} + \beta_2 \ln N^{\text{low}} + \beta_3 \ln P^{\text{low}} + \beta_4 \ln X + u \quad (3)$$

$$\text{Inequality} = \beta_0 + \beta_1 \ln T^{\text{high}} + \beta_2 \ln N^{\text{high}} + \beta_3 \ln P^{\text{high}} + \beta_4 \ln X + u \quad (4)$$

식 (3)와 (4)에서 사회적 자본 각 변수들에 첨부되어 있는 상첨자 low 및 high는 각각 5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계층과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을 구별<sup>18)</sup>하였음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각 사회적 자

16) Kuznets (1955)는 국가별·시계열별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수준과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는 경제적 불평등이 경제성장이 진행되는 단계에 점점 심화되다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된다고 보았다. 이를 ‘Kuznets 곡선’ 혹은 ‘역 U자 가설’이라 부른다.

17) 일반적으로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자가 풍부하게 존재하며 후진국은 상대적으로 비숙련 노동자가 풍부하게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산업화된 국가와 후진국 사이에 무역이 확대되면 산업화된 국가는 주로 비숙련 노동자가 생산한 재화를 주로 수입하게 되고, 숙련 노동자가 생산한 재화를 수출하게 된다(Stolper and Samuelson, 1941). 이는 산업화된 국가에서 저임금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억제로 작용하여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18)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실태조사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소득계층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월 500만 원을 고소득 기준선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통계청이 제시하는 중위소득 대비 150% 기준에 부합하며, 분석의 실질적 구분을 가능케 한다.

본 변수들은 각 소득계층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

통제변수들의 출처와 기대부호는 다음과 같다.

우선 1인당 실질 GDP(백만 원)와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의 「OECD Education at a Glance」 series로부터, GDP 대비 정부 재정지출 비중(%)은 한국은행 「국가재정지출통계」,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및 「Fiscal Monitor」 등으로부터, 그리고 GDP 대비 무역 비중(%)은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로부터 추출하여 시산하였다.

사회적 자본 변수 추정계수 중  $\beta_1$ 과  $\beta_3$ 의 기대부호는 신뢰( $T$ ,  $T^{low}$ 와  $T^{high}$ )와 사회적 참여 요인( $P$ ,  $P^{low}$ 와  $P^{high}$ )의 계수들로서 각각 부(-)이다. 즉, 신뢰와 사회적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적 불평등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사회적 관계망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proxy로서 사회적 관계망의 반대 개념으로 해석되는 ‘사회적 고립감’을 채택했기에  $N$ ,  $N^{low}$ 와  $N^{high}$ 의 추정계수인 각  $\beta_2$ 의 부호는 정(+)으로 기대한다. 한편, 통제 변수 중 1인당 GDP의 추정계수의 기대부호는 정(+), 1인당 GDP의 제곱항의 추정계수의 기대부호는 부(-)이다. 이는 전술한 ‘역 U자 가설’을 반영한다. 또한, 고등교육 이수율 추정치의 기대부호는 정(+) 혹은 부(-)이며 GDP 대비 정부 재정지출 비중 추정계수의 기대부호는 부(-), GDP 대비 무역 비중 추정계수의 기대부호는 정(+)이다.

한편, 가설 2와 관련,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식 (3)의 사회적 자본 추정계수들과 고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식 (4)의 사회적 자본 추정계수들은 서로 다른 영향력과 신뢰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의 범위는, 사회적 자본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추적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2년간의 데이터를 균형 패널 자료로 구성하였다.

## V. 추정 결과

식 (2)~(4)의 추정에 사용되는 각 원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별 기초통계량

| 변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     | 최대     |
|-------------------|--------|---------|--------|--------|
| inequality        | 0.600  | 0.009   | 0.584  | 0.612  |
| 신뢰                | 2.642  | 0.116   | 2.50   | 2.80   |
| 관계망(%)            | 1.668  | 0.092   | 1.53   | 1.83   |
| 참여                | 25.15  | 4.377   | 19.18  | 33.47  |
| 신뢰low             | 2.615  | 0.083   | 2.50   | 2.74   |
| 관계망(%)low         | 1.731  | 0.077   | 1.62   | 1.85   |
| 참여low             | 22.88  | 4.004   | 17.36  | 31.40  |
| 신뢰high            | 2.675  | 0.134   | 2.50   | 2.90   |
| 관계망(%)high        | 1.616  | 0.074   | 1.48   | 1.73   |
| 참여high            | 28.04  | 5.165   | 20.95  | 35.92  |
| 1인당 실질 GDP(usd)   | 31,494 | 2,411.4 | 27,180 | 35,126 |
| 고등교육 이수율(%)       | 49.83  | 3.943   | 42.0   | 54.0   |
|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 | 29.78  | 5.665   | 21.14  | 38.10  |
| GDP 대비 무역 비중(%)   | 83.0   | 9.217   | 69.03  | 97.95  |

<표 2>에는 각 모형의 추정 결과가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 판단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인 5% 유의수준을 중심으로 해석하되, 보조적으로 1% 및 10% 수준의 결과도 함께 보고한다.

모형의 설명력( $R^2$ )은 각 식에서 각각 0.44, 0.38, 0.41로, 패널 모형으로서 만족할 만한 설명력을 보인다. 더빈-왓슨 통계량(D-W stat)은 2.0 내외로 자기상관 문제가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동 패널 모형의 식별에 있어, 고정효과 모형과 임의효과 모형 추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각 식의 추정 모형들에 대한 Hausman 식별 검정 결과, <표 3>

에서 식 (2)에 대한 추정의 경우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절함을 나타내며( $p=0.03$ ), 소득계층을 수준별로 식별한 식 (3)과 (4)에 대한 추정의 경우 추정 통계량이 임의효과 모형에 식별 오차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 임의효과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식 (2)에 대해서는 고정효과 모형을, 식 (3)과 (4)는 임의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들을 보고한다.

<표 2> 실증 분석 결과

|        |                        | 경제적 불평등 |                       |                       |                      |
|--------|------------------------|---------|-----------------------|-----------------------|----------------------|
|        |                        | 기대 부호   | 식 (2)                 | 식 (3)                 | 식 (4)                |
| 사회적 자본 | 신뢰                     | -       | -0.185**<br>(-2.217)  | -0.205***<br>(-2.911) | -0.174**<br>(-2.142) |
|        | 사회적 고립감                | +       | 0.112**<br>(1.999)    | 0.153***<br>(2.762)   | 0.142*<br>(1.754)    |
|        | 사회적 참여도                | -       | -0.094*<br>(-1.733)   | -0.166**<br>(-2.352)  | -0.138<br>(-1.324)   |
|        | 1인당 GDP                | +       | 1.870**<br>(2.015)    | 0.968**<br>(2.350)    | 1.376**<br>(2.511)   |
| 통제 변수  | (1인당 GDP) <sup>2</sup> | -       | -0.262***<br>(-2.601) | -0.328***<br>(-3.424) | -0.198**<br>(-2.179) |
|        | 고등교육 이수율               | +/-     | 0.188*<br>(1.828)     | 0.201**<br>(1.958)    | 0.177*<br>(1.745)    |
|        |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         | -       | -1.015**<br>(-2.101)  | -0.985**<br>(-2.131)  | -0.141*<br>(-1.824)  |
|        | GDP 대비 무역 비중           | +       | 0.056*<br>(1.857)     | 0.114*<br>(1.879)     | 0.026<br>(0.744)     |
|        | R <sup>2</sup>         |         | 0.44                  | 0.38                  | 0.41                 |
|        | D-W stat               |         | 2.03                  | 2.11                  | 1.99                 |
|        | Hausman $\chi^2$       |         | 13.15(0.03)           | 3.85(0.47)            | 3.43(0.55)           |

주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주요 해석은 5% 기준에 기초하며, 그 외 유의수준은 상대적으로 강하거나 약한 신뢰도 수준으로 참고적 해석에 활용함.

우선, 경제적 통제변수의 효과를 볼 때, 전반적으

로 저소득층에서 통제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외부적 충격에 저소득층이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시사한다. 1인당 GDP의 비선형 추정 결과는 모든 추정에서 기대부호와 일치하였는데 이는 한국에서의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까지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나 일정 수준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면 불평등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 점은 Kuznets 가설(Kuznets Curve)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고등교육 이수율의 경우 모든 식에서 정(+)의 영향을 보였고, 이는 한국에서의 고등교육 기회의 불균형 또는 고학력층의 소득 프리미엄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모든 식에서 음(-)의 부호를 보였으며 특히 식 (2)와 식 (3)에서는 매우 유의미하게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정부의 재정개입이 재분배 효과를 통해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함을 나타낸다. GDP 대비 무역 비중 변수도 기대부호와 일치하였으며, 특히 식 (2)와 식 (3)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 개방도가 높아질수록 소득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의 효과이다.

소득계층을 식별하지 않은 식 (2)의 추정 결과를 보면 사회적 자본 변수의 각 추정치들은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면서 기대부호와 일치하고 있어 사회적 자본의 확대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개별 요소 측면에서 신뢰 변수의 영향이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적 참여 변수들에 비해 자산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신뢰'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변수라는 기존 연구 결과들<sup>19)</sup>과도 부합하고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가설과 관련하여 소득계층별로 서로 다른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보기

위해 소득계층을 수준별로 식별하여 추정한 식 (3) 및 식 (4)의 추정 결과들을 살펴본다.

두 소득계층 추정 결과에서 모두 사회적 자본 요인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영향력과 신뢰성 면에서는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 계층에서는 사회적 자본 요인들이 경제적 불평등 결정요인으로서 전통적 통제 요인들과 더불어 고소득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신뢰성과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고소득 계층에 대한 추정 결과에서는 ‘신뢰’와 ‘사회적 관계망’ 변수가 각각 5%, 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으나 저소득층 분석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낮았고, ‘사회적 참여’ 변수의 경우 기대부호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이 고소득층에서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본 연구의 결과들은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경제적 불평등을 빠르게 완화시키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자본 확충 노력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 <표 3>은 본 연구의 가설 1, 2의 부합성을 명확히 보기 위해 사회적 자본 분석 결과만을 요약한 표이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특히 신뢰가 가장 강한 설명력을 가지며, 저소득층에서 그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구조적 취약 계층일수록 사회적 자본이 일종의 ‘비공식적 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본 실증 분석 결과가 가설 1, 2에 명확히 부합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표 3> 사회적 자본 변수의 기대부호 및 통계적 유의성

| 변수      | 기대부호 | 전체계층 | 저소득층  | 고소득층 |
|---------|------|------|-------|------|
| 신뢰      | -    | 유의** | 유의*** | 유의** |
| 사회적 고립감 | +    | 유의** | 유의*** | 유의*  |
| 사회적 참여도 | -    | 유의*  | 유의**  | 비유의  |

## VI. 결론 및 시사점

본 분석은 사회적 자본 유형을 신뢰,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참여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회적 자본 요인들과 경제적 불평등이 한국에서 어떤 추이를 보여 왔는가를 살펴본 후,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는지, 또한 계층별로 영향력이 다른지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수행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현상이 단지 물질·인적 자본의 차이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분포에 있어서의 불균형 역시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신뢰,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참여라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 구성 요소들이 자산 기반 경제적 불평등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고, 그 영향력 및 신뢰도가 소득계층에 따라 상이할 것이라는 추가적 가설을 검증하였다.

한국에서 사회적 자본 중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의 신뢰 수준이 더 높게 유지되어 왔으며, 저소득층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2024년에는 오히려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보다 신뢰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도 발견되었으며, 이는 집단 내 공동체 연대 활성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회적 관계망 측면에서 볼 때, 저소득층의 사회적 고립감이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의 사회적 관계망이 상

19) Bolaños Pérez, N.P. & Saucedo-Acosta, E.J. (2022), Kirk Hamilton & John F. Helliwell & Michael Woolcock. (2016) 참조.

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이 확인되었고 COVID-19 팬데믹 이후 모든 계층에서 고립감이 증가했지만, 특히 저소득층의 회복탄력성은 낮았으며 사회적 자본의 이중구조화가 관찰되었다. 사회적 참여 측면에서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그러나, 2023~2024년에는 저소득층의 참여율이 크게 회복되면서 계층 간 격차가 다소 축소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경제적 불평등 측면을 볼 때,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10년 0.390에서 2024년에 0.309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복지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의 효과로 해석된다. 반면, 구조적인 불평등이나 자산 격차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2017년까지는 완만히 하락했으나, 2018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부동산 가격 폭등, 금융자산 격차 확대, 상속·증여 등 세대 간 자산 이전 증가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뢰,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참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핵심 요소 모두 경제적 불평등, 특히 자산 기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신뢰’ 변수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의 성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신뢰는 사회적 협력과 거래비용을 줄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키는 기반이 된다.

더 나아가 소득계층을 이분하여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이 고소득층보다 더욱 강력하고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더욱 중요한 자산임을 방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저소득층에게 강력한 ‘사회적 안전

망’ 혹은 ‘대안적 자본’의 역할을 하며, 단절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도 협력과 연대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이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그동안 주로 소득 재분배나 복지 지출 확대 등 가시적 측면에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는 무형 자산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에 있어 계층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는 공동체 기반 시설 확충, 생활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과 같은 지역 기반 조직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사회적 자본이 좀 더 폐쇄적으로 축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방형 네트워크를 장려하고 공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자산 기반의 경제적 불평등이 점점 구조적 고착화의 경향을 보이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한 소득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불평등 해소에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자본과 같은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단지 불평등 해소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성장 기반 자산임을 시사한다. 사회적 자본은 협력과 호혜성의 문화를 정착시켜 시장 기능의 왜곡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민주주의의 작동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와 정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불평등의 결정요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들을 도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사회적 자본 개념의 측정에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신뢰,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참여 등의 변수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였으나, 이는 사회적 자본의 다차원적 속성을 완전히 포착하기엔 다소 부족할 수 있다. 둘째, 자료 범위의 제한성도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분석에 사용된 「사회통합실태조사」 및 관련 통계는 2013년 이후라는 비교적 최근 시점부터 축적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불평등 간의 장기적 인과관계를 충분히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불평등 간의 인과성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 고정효과와 임의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내생성 문제를 일부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자본을 약화시킬 가능성 역시 상존한다. 이 점에서 인과성 추론을 더욱 정교하게 하기 위한 도구변수 접근법 또는 자연실험 설계 등이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넷째, 계층별 분석에 있어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실제로 계층 간 격차는 단지 소득이 아닌 교육 수준, 직업 안정성, 지역, 가족 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더욱 정교하게 통제하여 다층적 계층 구조에 관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국제 비교 분석의 결여라는 한계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진현 (2021). 청년이 인식하는 소득불평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41(2), 83-100.
- 유석춘, 박동서, 조홍식, 김기원, 김광식, 유홍준 (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
- 정세창, 오창수, 김혜란 (2011). 생명보험산업에서 비대면채널의 성과분석. 한국보험학회지, 85, 79-108.
-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호 자료.
- 최정아 (2024). MZ세대의 사회자본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사회, 15(3), 1-23.
- Atkinson, A. B., & Brandolini, A. (2001). Promise and pitfalls in the use of "secondary" data-sets: Income inequality in OECD countries as a case stud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9(3), 771-799.
- Blanchflower, D., & Oswald, A. (2004).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1), 1359-1386.
- Bolaños Pérez, & Saucedo-Acosta, E. J. (2022). Social Capital and Income Inequality in OECD Countries: Causality Evidence", *Springer Proceedings in Business and Economics*, in: Pantelis Sklias & Persefoni Polychronidou & Anastasios Karasavoglou & Victoria Pistikou & Nikolaos (ed.), *Business Development and Economic Governance in Southeastern Europe*, 35-52, Springer.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Greenwood.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95-120.
- Crosnoe, R. (2004). Social Capital and the Interplay of Families and School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2), 267-280.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NY:

- The Free Press.
- Gu, L., Yang, L., & Li, H. (2023). *Does social capital aid in leveling the income gradient in child mental health?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left-behind and not-left-behind Chinese children*. BMC Public Health, 23, 1404.
- Guido de Blasio & Giorgio Nuzzo. (2012). Social Capital and Inequality in Italy. *Questioni di Economia e Finanza (Occasional Papers)*, 116, Bank of Italy, Economic Research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rea.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nd Fiscal Monitor data*.
- Kang, S., & Koo, J. (2023).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capital on daily psychological stress in an unequal society: A case study of Seoul.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3(4), 11–36.
- Kang, S., Lee, J.-L., & Koo, J.-H. (2023).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capital for daily mental stress in an unequal society: a lesson from Seoul. *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 22, 64.
- Kawachi, I., Kennedy, B. P., & Wilkinson, R. G. (1999). Crime: Social disorganization and relative depriv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48(6), 719–731.
- Kirk Hamilton, John F. Helliwell, & Michael Woolcock. (2016). Social Capital, Trust and Well-being in the Evaluation of Wealth, *NBER Working Papers 2255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Kuznet, S. (1955).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45(1), 1–28.
- Lilian Lopes R. & Jair Andrade de A. (2018). Social capital and poverty in Brazil.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38(4), 749–765.
- Lustig, N. (2016). Inequality and fiscal redistribution in middle income countries: Brazil, Chile, Colombia, Indonesia, Mexico, Peru and South Africa. *Journal of Globalization and Development*, 7(1), 17–60.
- Meltzer, A. H., & Scott Richard. (1981).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5), 914–27.
- Muringani, J., Fitjar, R. D., & Rodríguez-Pose, A. (2021). Bridging, bonding, and linking social capital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Europe.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53(3), 632–654.
- North, D.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 (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00). *Human and social capital and sustained growth and development, reconciling new economies and societie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Paris : OECD.
- OECD. (2023). *Income inequality (indicator)*. OECD Data.
-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 series data*.
- Pilatin, S., Kapusuzoglu, A., & Kucukvar, M. (2023).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Turkish provinces. *Economics and Business Review*, 9(3), 117–135.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Samuelson A., Sefa, A. C., Russell S. & Quanda Zhang. (2022), Social Capital Inequ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Chinese. *Social Indicators Research: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Journal for Quality-of-Life Measurement*, Springer, 160(2), 541-563.
- Skewes, J., & Nockur, L. (2023). National inequal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goods decision-making. *Current Research in Ecological and Social Psychology*, 4(9-10), 100-112.
- W. F. Stolper, & P. A. Samuelson. (1941). Protection and real wage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9, 58-73.
- Williamson, O. E. (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irms, markets, relational contracting*, Free Press.
- World Bank. (2020). *Taking on Inequality*. Washington, D.C.: World Bank.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statistics*.
- Yang, T., & Zhang, T. (2024). Social capital meets guanxi: Social networks and income inequality in China. *China Economic Review*, 83, 102094.
- Zak, P. J. & S. Knack. (2001). Trust and Growth. *Economic Journal*, 111, 295-321.
- Zhang, Q., Su, Z., & Liu, Y., (2017).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regional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China. *Chinese Journal of Population Science*, 2017(2), 53-65.
- Traub, V. (1992). *Desire and Anxiety: Circulations of Sexuality in Shakespearean Drama*. London: Routledge.
- Turkle, S. (1995). *Life on the Screen: Identity in the Age of the Internet*. New York: Simon & Schuster.
- Turkle, S. (2011). *Life on the Screen*. Simon and Schuster.
- Warner Music Group (2013). WARNER MUSIC CHINA STRIKES LANDMARK ALBUM DEAL WITH CHINESE SUPERSTAR LAY ZHANG. 2025.2.25. <https://www.wmg.com/news/warner-music-china-strikes-landmark-album-deal-with-chinese-superstar-lay-zhang>
- Wen, J. (2024). *The Construction of K-pop Female Idol Groups in Documentaries: a Gender Analysis*.
- Zhao, J. J. (2021). Blackpink queers your area: The global queerbaiting and queer fandom of K-pop female idols. *Feminist Media Studies*, 21(6), 1033-1038.
- 투고일자: 2025. 4. 25.  
심사일자: 2025. 5. 27.  
게재확정일자: 2025. 6. 9.

# A Study on Social Capital as a Determinant of Economic Inequality

YoonJin Hwa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social capital—an area of growing interest in both academic and policy circles—on economic inequality in Korean society. Social capital, which encompasses trust, social networks, and civic participation, represents the qualitative dimensions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and serves as a non-material explanatory variable that complements conventional frameworks of economic resource distribution. The empirical findings indicate that the core components of social capital—trust, social networks, and civic participation—contribute significantly to mitigating economic inequality, with trust emerging 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 stratified analysis reveals that the inequality-reducing effect of social capital is particularly pronounced among low-income groups. This suggests that social capital plays a crucial role for structurally vulnerable populations. The findings further underscore that policies aimed at alleviating economic inequality should integrate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the strategic expansion of social capital alongside material redistribution measures. Such an approach redefines social capital as a vital mechanism for promoting inclusive growth and achieving sustainable social integration.

*Keywords:* Social Capital, Trust, Network, Social Participation, Economic Inequality.